한·일 수교 50년

관계 개선 위해 풀어야 할 세가지 과제

①위안부-법적 책임 불인정…잇단 협의 속 의견차 여전

②강제징용-1965년 청구권 협정 근거로 보상 외면

③독도-갈수록 심해지는 교과서 왜곡 등 끝없는 야욕

국교정상화 이후 50년 동안 한일관계는 끊임없는 부침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대표적인 3가지 '전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그리고 독도 문제다.

◇"반인도 불법행위" vs "법적책임 불인정"=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오늘날 한일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자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자 매듭지어야 할 최대 숙제로 꼽힌다.

일본 정부나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해 인도에 반(反)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따라서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책임을 끈질기게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미흡하게나마 몇 차례 문제 해결 시도를 한 것은 결국 위안부 제도의 명백한 반인도적 성격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군위안부 모집·이송·관리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지난 1993년 8월 담화, 즉 '고노담화'다. 1995년에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해 위로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은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이라고 비난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교당국 국장간 협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총 8차례 협의를 통해 양국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으나, 핵심적 쟁점에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후처리 근본 묻는 강제징용 피해배상=일본군 위안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후처리'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다. 1965년 청구권협정의 성격은 물론, 식민지배하 일제가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지니는 사안이다.

강제징용 피해배상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현안으로 부각됐다.

1940년대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후신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앞서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배상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를 받아서 2013년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기업들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피고 기업들이 불복 절차를 밟아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중이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 결론은 예상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다. 우리 정부도 그간 강제징용자 보상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다.

강제징용 미수금은 청구권협정 당시 우리가 제기한 대일청구요강에 들어 있었고, 일본군 위안부·원폭 피해자·사할린 동포 문제만 불포함됐다는 게 기존 정부 인식이었다. 한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외교 갈등도 피할 수 있는 창조적 해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 끝없는 독도 야욕=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또한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주기적으로 한일 간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양국이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는 과거사 사안과 달리, 독도 영유권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인화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인 1905년 망루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 소속으로 고시하고 무단 점유하기 시작했다.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생된 땅'이라는 우리 정부의 인식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일본은 '한국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자 일본도 수교 후 처음으로 ICJ 제소를 공식 제안하는 등 공세를 강화해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아베 내각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3년 전부터 정부 대표를 파견해왔다. 일본 교과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기술도 해가 갈수록 증가·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분쟁화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시리아 난민 목숨 건 피난길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부의 텔아비야드에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간 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터키 남부 악차칼레로 피난길에 오른 시리아 난민이 어린이를 웅덩이에서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 뎅기열 확산…여행주의보

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뎅기모기로 전파…심하면 사망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열대성 질환인 뎅기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들어 5월 23일까지 4만5070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해 작년 동기보다 34.7% 급증했다.

이중 5월 넷째주에 보고된 환자가 1944명으로 전주보다 16.1% 증가하는 등 뎅기열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6월 6일까지 144명의 뎅기열 환자가 숨져 작년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했다.

베트남에서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뎅기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5월 남부도시 호찌민의 뎅기열 환자는 453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1.4% 급증했다. 북부에 있는 수도 하노이의 뎅기열 환자는 104명으로 62명 늘어났다.

미얀마에서는 최대 경제 도시인 양곤을 비롯해 몇몇 도시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다. 양곤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900여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떠닌따리 주의 주도인 미에익에서는 어린이 뎅기열 환자가 300명 이상 발생했다.

양곤시 보건 당국자는 지난 5개월 동안 발생한 뎅기열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환자의 3배에 해당된다며 "뎅기열은 2~3년 주기로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곤에서는 지난 2013년 한 해 뎅기열 환자가 4700여명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만3000여 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해 이중 0.32%가 숨졌다.

뎅기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뎅기열은 최장 2주일의 잠복기간을 거쳐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간부전이나 신부전 같은 합병증,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신드롬' 등으로 숨질 수 있다.

美전문가 "북한 10년 안에 붕괴"

북한 정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상호 모순적이며, 이런 모순의 심화로 인해 북한 정권이 약 10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는 미국 아시아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제이미 메츨 애틀랜틱카운슬 수석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정권)의 광기가 종말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츨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로 핵무기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해 공포를 줄 능력, 그리고 경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을 꼽았다.

그러나 핵개발을 추구할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에 주로 의존하던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주민들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워지는 등 북한 정권의 생존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메츨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경매투자! 무엇이 정답인가!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특수비법 배우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주 1회 2시간 3개월 완성
■ 1대1 실전사례 교육
■ 임장 / 교육비 등 2200만원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지분이전으로 보장
■ 연 12% 이상 수익률
■ 투자금 1억원 이상
■ 모든과정 공개 투명처리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

돈 빌려주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연 12~20% 이자 지급
■ 차용금 1억원 이상
■ 1년~2년 정도 기간
■ 개인신상 비밀 보장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8번지, 34평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축
■ 신우APT 105동옆, 즉시 입주가
■ 매매가 1억 6400만원 (융자 1억 1천만원 안고)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65만원 가능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010-3605-5000

■ 월산동 110-18번지, 19평
■ 5층 중 5층, 전망좋음, 베란다 있음
■ 신우APT 105동옆, 즉시 입주가
■ 매매가 9500만원 (융자 7000만원 가능)
■ 전세 8000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 1필지
■ 동면방향, 화순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말 완공예정
■ 매매가 1억 3천 120만원 (평당 40만원)

전대병원 화순 자애원 동면 성심 장례식장 광덕교차로

주인직매 H.010-3605-5000